

개혁기 중국조선족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고찰: 구심력과 원심력을 중심으로

리상우*

- I. 머리말
- II. 개혁기 조선족사회의 위기(변화)
- III. 조선족사회의 “붕괴” ? : ‘불온한 민족’ 에서 민족융합의 모델로?
- IV. 결론

조선족은 중국의 토착화한 민족이 아니라 이주민족으로 후에 소수 민족으로 분류된 소수민족이다. 개혁기 개혁개방노선의 추진은 조선족사회를 심각하게 변화시켰는데, 특히 한중수교로 인한 민족주의 고양으로 중앙정부의 주시를 받는 민족으로 되었다.

근래에는 조선족사회 ‘위기설’, ‘붕괴론’과 같은 일련의 주장들이 제기되며 중국 민족융합정책의 모델로 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개혁기 조선족사회 위기(변화)의 원인과 의미를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결론에서는 조선족사회가 심각한 변화속에 있고 또 여러 가지 난제에 봉착해 있지만, 이는 발전과정의 불가피한 ‘진통’이지 해체나 붕괴의 수준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러한 난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한 민족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주제어: 조선족사회, 정체성, 구심력, 원심력

* 서강대 정외과 박사과정

I. 머리말

이 글은 개혁기 중국 조선족사회 변화의 원인을 찾아내고 이런 변화가 ‘위기’나 ‘붕괴’, 즉 한족(漢族)으로의 융합(동화)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시장화, 사유화 및 분권화의 발전 및 경제적 효율성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혁개방노선의 추진으로 세계의 주목을 끝만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지속적 유지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함께 개혁정책이 초래한 많은 난제에 봉착하고 있다. 즉, 지역 및 노동간 격차, 소수민족문제, 실업 등을 대표적인 난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 가운데 영토·정치·경제적 통합과 관련되는 소수민족문제는 중국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사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즉, ‘민족문제에는 작은 일이 없다’¹⁾는 입장이 그것이다.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며, 다수민족인 한족을 제외한 55개 소수민족가운데 ‘정치적 민족주의가 고양되어 있는’ 몽골, 위구르, 티베트, 회, 조선족은 특히 중앙정부의 주목을 받고 있다.²⁾ 특히 1992년 한중수교로 중국 조선족의 민족주의가 고양되면서 중앙정부의 주목과 통제를 받게 되었는데, 중국정부는

1) 『홍콩강신문』, 2007. 1. 30. 참조. 박병광(2000)은 중앙정부가 소수민족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로, 첫째, 전 국토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는 영토적 중요성, 둘째, 구소련 해체 이후 독립한 중앙아시아 국가, 몽골, 인도, 베트남,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변방지역이라는 정치 군사적인 ‘전략적 이유’, 셋째,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원상의 이유’, 넷째, 소수민족거주 지역 대부분이 인구가 희박한 지역으로 한족지구의 과잉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는 ‘인구상의 이유’ 다섯째, 소수민족의 통합과 안정 및 경제와 문화수준의 향상이 결국 사회주의 중국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다는 ‘대외적 위신의 이유’ 등으로 정리한다. 박병광이 제시한 이러한 이유 외에도 소련과 동구권 붕괴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강압적인 소수민족정책이라는’ ‘경험적 이유’도 들 수 있다.

2) 중국 정부는 몽골, 티베트, 회, 조선족을 ‘중국 사회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네 개 민족’으로 규정하였다. 『동아일보』1994. 1. 28 참조.

티베트, 위구르, 몽고, 조선족을 1994년 조국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불온한 민족’으로 규정하였다.³⁾ 그러나 한편에서는 조선족사회의 ‘위기설’이나 ‘붕괴론’이 제시될 만큼 정체성이 약화되어 중국 민족정책의 목표인 민족융합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⁴⁾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조선족은 대륙 총인구의 0.15%, 55개 소수민족 중 제13위의 인구규모밖에 안 되지만 중국사회에서는 ‘특수한 존재’이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중국의 혁명과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 공로가 가장 큰 소수민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⁵⁾ 현재는 정치·경제·교육·문화 등 발전의 모범인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주체 민족으로, 중국 각 민족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고 부러움과 존경을 받는 민족이다.⁶⁾ 더욱이 고국(모국)이 남북한으로 분단국가라는 상황 역시 ‘특

3) 이진영(2002a, 27 ; 2001, 66)은 중국 소수민족의 민족주의에 있어서 정치적 민족주의와 문화적 민족주의의 틀로 소수민족의 대응을 분석하는데, 정치적 민족주의가 고양된 민족으로 몽고, 위구르, 티베트, 회, 조선족의 5개 소수민족이 해당된다고 보면서, 중국정부가 위의 5개 민족을 잠재적인 정치적 도전 세력으로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장한다. 문제는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실제적인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며 테러 등의 활동을 하는 다른 민족과는 달리 조선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중국정부가 조선족 문제를 단순한 국내 문제로 보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중국 조선족사회 내부에도 위에서처럼 정부가 티베트, 위구르, 몽고 다음으로 조선족을 분리경향이 있는 민족으로 보는 담론들이 존재한다. 한반도 국가가 고국(모국)인 과정(跨境)민족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문제로 보인다.

4) 이진영(2002a, 33) 참조.

5) ‘山山金達萊, 村村烈士墓’, (산마다 진달래요, 마을마다 열사비라)의 묘사처럼 중화인민공화국의 창립과 공화국 창립 후의 일련의 전쟁과 전투를 위해 수많은 조선족의 아들딸들이 생명을 바쳤다. 조선족 열사의 숫자에 대해서는 엇갈린 기록들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全國文化信息資源共享工程의 기록을 참조로 한다. 연변조선족자치주에 적을 둔 조선족 열사의 숫자는, 항일전쟁 시기 1,713명, 해방전쟁(국공내전) 시기 3,350명(연변조선족자치주 열사 총 숫자) 열사의 90.7%, 6.25전쟁 시기 6,076명(연변조선족자치주 열사 총 숫자) 열사의 98%임. 이외에도 중국의 과학기술이나 교육문화 발전에 필요한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다.

6) 특히, 조선족은 경제·교육문화수준에 있어 중국 기타 소수민족(교육문화의 경우는 주체 민족인 한족을 포함한 기타 민족들에 비해 수준이 높다)에 비해 앞섰다. 정치면에서는 중국의 간부충원제도의 특수성으로, 또 한족과 기타 소수민족의 인구비례 등 측면에서

수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든다. 즉 티베트의 경우, 중국 전체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고, 신강과 함께 분리주의 운동의 잠재성과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다면, 조선족은 앞서 제시한 특수성으로 인해 민족사회의 변화가 기타 소수민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혁기 이런 '특수한' 구성체인 조선족사회의 변화 역시 중국 소수민족문제의 파악에 있어서는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한국⁷⁾내에서 행해진 중국 소수민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소수민족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고찰이나 개혁기 소수민족에 대한 개발주의의 경제전략, 그리고 소수민족 분리주의를 주요 주제로 다루어왔다.⁸⁾ 특히 같은 민족으로서 접근이 더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족 문제를 다루는 연구자는 극소수일 뿐 아니라⁹⁾, 접근법에 있어서도 중국조선족의 민족정체성, 재외동포법 및 재외동포정책과 조선족, 남북관계 및 한중관계와 조선족, 조선족의 인구이동과 이주노동자로서의 조선족 등 분산적이고 단편적인 주제들¹⁰⁾을 다루고 있다.

볼 때, 소수민족의 경우, 누가 누구에 비해 나은 상황이라 말하기 어렵다. 또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우, 중국 국무원(國務院)으로부터 1994년, 1999년, 2005년 세 차례 민족단결의 모범으로 평가받은 전국 30개 소수민족자치주 중 유일한 소수민족자치주이다.

7) 여기에서의 한국은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8) 중국 소수민족 관련 대표적 연구로는 전인영·김소중·금희연(1996); 전성홍(1998); 박병광(2000); 최우길(2000), 이진영(2002a); 조정남(2002); 이동률(2003) 등이 있다.

9) 한국내 대표적인 조선족 연구자로 이진영, 최우길, 임채완 등을 들 수 있는데, 정부나 재단의 관련연구에 대한 지원이 적은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될 수 있겠다. 특히 중국조선족문제는 한국정부가 관심하는 문제가운데 102번째 가는 문제라고 할 정도로 한국정부는 조선족문제에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익명의 한국정부 공무원과의 대화)

10) 민족정체성의 연구는 최우길(1999), 이현정(2001), 임채완 외(2002), 윤인진(2002), 유명기(2002), 김재기(2002, 2003, 2005b), 김명희(2003a); 재외동포법 및 재외동포정책과 조선족 관련 연구는 이진영(2002b, c), 최우길(2000, 2001a); 남북관계 및 한중관계와 조선족 관련 연구는 최우길(2001b), 임채완(2002), 김재기(2005a, 2006); 조선족의 인구이동과 이주노동자로서의 조선족 관련 연구는 설동훈(1999, 2002), 유명기 외(2006), 전형권(2006) 등이 대표적이다.

조선족정책을 주제로 다른 몇 편 안되는 기존의 연구¹¹⁾ 역시 조선족정책의 변천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즉,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입장¹²⁾이나 티베트나 신장처럼 국제 이슈화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가통합전략으로의 접근은 의의가 크지 않다는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와 같은 기존의 접근법에서의 한계를 보완하여, 이 글에서는 개혁기 중국의 정치경제연구 분야에서의 국가통합과 관련된 연구를 조선족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하려 한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족 사회의 변화, 즉 민족정체성 유지에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요인과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의 비교를 통해 국가통합전략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 볼 수 있고, 중국조선족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조선족사회의 위기(변화)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그러한 위기를 가져온 원인을 분석한다. 즉, 원심력요인으로서 중국정부의 개혁개방정책으로 나타난 조선족의 인구이동과 중앙정부의 민족융화정책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위기의 의미와 이런 변화와 함께 제기된 ‘위기설’ 및 ‘붕괴론’과 같은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우선 ‘문혁’기와 같이 급진적 동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사회가 민족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구심력’ 요인들을 설명한다. 이어서 현시점에서 본 원심력요인을 아우를 수 있는 구심력요인들로서는 조선족사회의 재조합, 경제·교육·문화 관련 요인, 정책적 요인과 조선족사회 지식인의 자각 등을 들어 원심력요인과의 비교 속에서 분석한다. 특히 조선족사회의 재조합에 주목하는데, 도시에서의 조선족과 한국인으로 구성된 ‘한인공동체’와 농촌에서의 ‘조선족

11) 중국의 조선족 정책에 대한 기존연구의 경우, 이진영(2001, 2002d, e)을 들 수 있다.

12) 이진영(2001)을 참조.

집중촌 건설론'이 조선족사회 '위기설'을 반박하는 핵심적 논지이다.

II. 개혁기 조선족사회의 변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변화도 큰 것이었지만 조선족 내부에서의 변화진폭은 그보다 더 격렬한 것이었다. 물론 이 변화에는 긍정적, 부정적인 것이 뒤섞여 있다. 비단 조선족만이 아니더라도 13억 중국인 모두가 해일처럼 밀려드는 시장경제 속에서 심각한 변화를 겪은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 조선족사회의 변화는 다른 55개 소수민족이 겪고 있는 변화에 비해 훨씬 격렬하다. 이는 시장경제 때문만이 아니라 한중수교 이후 한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진 것에서 크게 기인한다는 점에서 다른 중국인의 경우와 큰 차이가 있다.

개혁개방정책은 중국조선족의 경제·사회의 발전을 추동시켰고 의식변화를 야기하였으며 생활수준을 제고시켰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인구이동과 더불어 조선족 사회에 나타난 비교적 중요한 문제로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조선족사회 '위기설' 이나 '붕괴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족사회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위기론의 내용은 인구축소의 위기, 경제쇠퇴의 위기, 민족교육 및 정체성의 위기 등으로 제기되고 있다.

1. 조선족사회의 위기(변화)

(1) 인구축소의 위기

조선족사회위기론에서 가장 첫 번째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양

적인 의미에서 인구규모의 위기이다. 2000년 제5차 중국 인구조사에 의하면 조선족 인구는 1,920,597명으로 1990년 제4차 인구조사에서의 1,923,361명에 비하면 겨우 3,245명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이다. 조선족의 유일한 자치주인 연변은 1952년 자치구였을 때 인구의 62%가 조선족이었으나 1955년 연변조선족자치주로 격하되고 중국정부의 조선족 분산정책에 의해 점차 조선족의 인구비율이 낮아져 1995년에는 39.52%로 줄어들었다.¹³⁾ 특히, 1996년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이래 처음으로 자치주의 조선족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조선족의 인구가 37.3%밖에 못 미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연변의 조선족 인구는 2050년 50만 명, 2090년 20만 명으로 감소하여 연변을 조선족자치주로 평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견을 근거로 연변조선족자치주가 해체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주장¹⁴⁾도 제기되고 있다.

조선족 인구는 전국 총인구에서의 비례, 소수민족의 총인구에서의 비례를 보았을 때, 하강되는 추세를 보였고, 동 시기 전국 인구의 증가수 및 비율, 소수민족 인구의 증가수 및 비율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차이가 뚜렷하다.(조선족의 인구와 관련해서는 <표 1>, <표 2> 참조.)

13) 정신철(2004, 37). 개혁개방 초기, 아직 문호가 채 열리지 않았을 때 조선족은 중국의 대도시로 진출, 그 인구가 30만 명에 달했다. 이는 조선족 총 인구의 6분의 1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90년대부터 시작된 해외나들이이다. 그 인구 또한 근 30만 명으로 조선족 총인구의 6분의1을 차지한다.

14) 연변조선족자치주통계국(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局)의 통계자료(2006)를 참조. 정해운(『코리아넷-2007년도 세계한인회장대회 클럽』게시판)에 따르면, 자치주내 조선족 인구는 32%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통계국의 공식자료를 기준함. 제공한 수치는 다르지만, 조선족 인구비례가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다.

〈표 1〉 조선족인구의 연도별 비중

연도	전국 총인구 (명)	소수민족 총인구 (명)	조선족 인구 (명)	전국 총인구 중 조선족 인구의 비율(%)	소수민족 총인구 중 조선족 인구의 비율(%)	소수민족 중 조선족 인구 순위
1953년	601,938,035	35,320,360	1,120,405	0.186	3.172	11
1964년	723,070,269	39,883,909	1,339,569	0.185	3.359	11
1982년	1,031,882,511	67,233,254	1,765,204	0.171	2.625	12
1990년	1,160,017,381	91,200,314	1,920,597	0.166	2.106	14
2000년	1,295,330,000	106,430,000	1,923,842	0.149	1.808	14

* 자료 : 中華人民共和國統計局人口普查公報¹⁵⁾를 정리한 것.

〈표 2〉 조선족과 소수민족 인구 증가의 비교

연도	전국인구의 증가수(명) 및 증가비(%)		소수민족인구의 증가수(명) 및 증가비(%)		조선족인구의 증가수(명) 및 증가비(%)	
1953년-1964년	121,132,234	20.124	4,563,549	12.920	219,164	19.561
1964년-1982년	308,812,242	42.708	27,349,345	68.572	425,635	31.774
1982년-1990년	128,134,870	12.418	23,967,060	35.648	155,393	8.803
1990년-2000년	135,312,619	11.665	15,229,686	16.699	3,245	0.169

* 자료 : 中華人民共和國統計局人口普查公報¹⁶⁾를 정리한 것.

(2) 경제식퇴의 위기

두 번째 위기론의 내용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위기이다. 중국조선족은 전통문화의 가치관인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이 강하여 지위나 학식, 체면을 우선시한다.¹⁷⁾ 양반은 굶어죽어도 일을 해서는 안

15) 中華人民共和國統計局人口普查公報 1~5(1953년, 1964년, 1982년, 1990년, 2000년)을 참조.

16) Ibid.

17) 그 외, 조선족의 단점으로 조선족 학자들은 월경민족으로서의 ‘떠돌이 의식’, ‘손님 사상’, ‘하루살이’심리 등을 든다. 허명철 외(1994, 109, 222, 271~285).

된다는 관념이 강한 조선족은 건설현장 등과 같은 힘들고 낯은 일을 하는 것을 체면이 깎이는 일로 생각한다.

한중수교 후 조선족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 조선족 경제 성장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였다. 반면 한국에만 가면 혹은 가야만 목돈을 벌 수 있다는 즉 경제적 소득의 원천은 한국뿐이라는 인식 때문에 중국 현지에서 일할 의욕을 점차 상실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물가가 높고 소비수준이 높은 조선족지구는 외지인에게는 돈벌이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너도 나도 앞 다투어 몰려오는 상황이 나타났지만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외지에서 돈벌어온 조선족이 현지에서 소비하고, 외지인들이 조선족지구에서 돈을 벌어 자기의 고향에 돌아와서 소비하는 상황이 되었다. 현지 혹은 민족 산업의 발전에 의존하지 않고 지나친 한국경제의존으로, 1997년 외환/금융위기로 인한 한국경제의 부진은 조선족경제의 부진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 시기는 조선족사회의 위기론이 대두한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3) 민족교육 및 정체성의 위기

마지막으로 제시할 수 있는 위기론의 내용은 교육과 정체성의 위기이다. 중국정부의 개혁개방이 심화될수록 중국내에서 외부와 접촉이 불가피해지고 상호경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어를 모른다는 것은 곧 도태를 의미한다. 즉, 국가기관에서의 진출이나 경제활동 참여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도시로의 진출을 통해 언어장애를 절감하게 되었고, 따라서 새로운 생존전략으로 상당수의 가정들에서 자식들을 한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시켜 중국어공부를 시키고 있다.¹⁸⁾

18) 그 외, 지나치게 중국어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우리말은 필요 없다는 식의 ‘조선말 부용론’이나 한족학교와 달리 수급(금전적 지출)이 많고, 교사에게 인사지배를 해야

〈표 3〉 연변한족(漢族)중소(中小)학교에 재학중인 조선족 학생수 비율¹⁹⁾

연도	1976	1979	1983	1985	1987	1995	1999	2000
조선족 소학생 총수의 %	12.5	9.4	6.5	3.6	3.4	8.14	9.2	11.2
조선족 중학생 총수의 %	25	18	12	12.3	7.6	7.43	8.5	9.55

게다가 농촌인구의 이동으로 농촌 학교는 문을 닫고 남은 학생은 한족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도시나 농촌 모두에서 민족교육의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이 되었다.

도시에서는 타민족, 주로 한족과의 통혼(通婚, 민족간 혼인)현상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는데, 민족지역의 경우 각 소수민족의 집성촌이 있고 그 내부에서 각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혼인습관과 규범으로 타민족과의 통혼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도시의 진출로 인해 다른 민족과의 통혼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통혼으로 태어난 아이의 민족선택에 관련된 규정에 의하면, 만 18세 전에는 부모가 민족을 결정하고, 만 18세가 되면 본인이 민족을 결정하며 만 20세가 넘게되면 민족을 바꿀 수 없다. 대학입시와 같은 여러 가지 규정에서 소수민족은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민족은 조선족을 선택하더라도 도시의 한족학교에 다니는 추세가 들어가며, 또 부모가 특별히 민족 언어나 풍속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조선족부부사이에서 태어나 한족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경우에도 명분만 조선족일 뿐 한글을 쓸 줄 모르는 준(準)한족이 되는 것이다.

정체성이란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동질감이며 다른

하는 등 부정적인 기풍도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19) 허명철 외(2003, 79)를 참조.

집단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동질감을 느끼도록 하는 요소는 집단의 과거와 역사, 집단의 결합 정도, 신화와 전설, 관습, 언어체계, 사고 구조, 기본인성, 타 집단과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²⁰⁾ 그러나 이러한 중국조선족의 정체성이 위기에 처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정치·경제·문화 교류가 깊어짐에 따라 법적으로는 중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조선민족으로서 점차 ‘중간집단’화 되고 있다.²¹⁾ 즉, 연구자들이 말하는 법적으로는 중국인이지만, 혈통적으로는 한민족이란 ‘이중적 정체성’ 또는 ‘이중적 존재’가 그것이다.²²⁾

2. 조선족사회 위기(변화)의 원인

개혁개방정책에 힘입어 중국조선족사회의 경제는 구조적으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또 생활수준의 제고와 더불어 의식구조에도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다. 산업구조가 오랜 농업위주의 구조로부터 2, 3차 산업의 비중이 늘게 되면서 생활수준 제고를 가져온 반면, 출생률 저하로 인한 조선족학교 규모의 축소, 교사의 이직(移職)현상과, 민족 언어 사용과 관련한 언어상의 위기 국면 등이 나타나고 있다.

(1) 개혁개방정책과 인구이동

중국 소수민족의 분포 양식은 대체로 ‘대잡거, 소취거(大雜居, 小聚居)’²³⁾로 요약될 수 있다. 조선족사회는 특수한 역사 환경과

20) 임봉길(1997, 194)을 참조.

21) 이두원(2006, 2)을 참조.

22) 임채완 외(2002, 248)을 참조.

23) 대잡거(大雜居)는 큰면적상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 것을 가리키고, 소취거(小聚

조건하에서 이주민과 그 후손을 근간으로 형성된 특수한 민족공동체이고, 원래는 벼농사를 주로하는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농경민족이었다. 거주에 있어서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집거 지구와 같이 한 곳에 집중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개혁개방 초기에 토지집단화 운영이 농촌사회의 경제발전을 속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의 토지제도개혁에 착수하여 연산승포책임제(聯產承包責任制)²⁴⁾를 실시했는데, 이에 따라 농민들은 농업생산에서 과거의 피동적 위치를 벗어나서 생산적극성을 높이고 노동효율도 크게 제고시킬 수 있었다. 즉, 농업생산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단위 농사 시간을 축소하고 인력을 감소시켜 다량의 농촌 잉여 노동력과 잉여 노동시간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농민들이 농지를 떠나 다각경제경영에 종사하거나 인구이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다른 면에서 개혁은 농민에게 점차 도시진입의 문턱을 낮추고 인구이동을 제한하는 호적제도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낳았으며, 공급제도 개혁, 즉 과거 도시 거주민에게만 베풀어 온 식량과 식용유 등 생필품의 가격과 공급을 풀어놓는 등 일련의 조치는 농민들이 도시에 거주한 후로는 각 종류의 공급증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되어 농촌인구가 비교적 자유롭게 도시에 진출하여 상업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할 수 있는 양호한 외부적 조건을 마련하였다.

중국조선족의 인구이동은 국내이동의 측면에서는 한국기업의 중국 진출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國家民族事務委員會)의 자료에 따르면 1990~96년 기간동안 약 20만명의 조선족 농촌인구가 연해지방이나 동북의 도시지역으로 이

居)는 소면적에 소수 민족이 모여 사는 것을 가리킨다.

24) 농민개인과 토지를 직접 결합시켜 농민들이 토지사용의 지배권을 가지게 하는 제도.

동하였다. 이는 조선족 전체인구의 10%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체 인구의 6.8%가 유동인구로 알려진 한족의 경우는 물론, 다른 소수 민족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²⁵⁾ 이에 따라 인구 90% 이상이 농민이었던 조선족 농촌공동체의 전통적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

또한 해외이동의 측면에서는 1980년대 말 이후 조선족들이 개방된 중국의 정책을 타고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을 비롯한 일본, 러시아,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에 진출한 인구가 30여만명 정도로 추산되어 중국조선족 총인구의 1/6을 차지하게 되었다.²⁶⁾ 특히 한중수교 이후, 한국이 해외인구유동의 중요 목표로 되었다. 중국조선족 사회는 ‘한국바람’으로 인해 모두가 본업을 포기한 채 한국으로 이동하여 문자 그대로 공동(空洞)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²⁷⁾. 즉, 이동과정을 볼 때 한중수교로 인구가동이 이촌향도로부터 점차 해외로의 이동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보였다.

조선족의 국내·외 이동에 따른 조선족의 도시화 비율은 45.7%로 중국 전체의 도시화 비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 신화통신사 2002년 9월 2일 보도에서 추정한 중국의 평균 도시화 비율인 26.5%에 비해 거의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호적과 임시 거주증을 갖고 있는 인구수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호적을 원래의 거주지에 남겨두고 도시로 진출하였으나 임시거주등록을 하지 않는 인구수를 감안하면 실제수치는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즉 개혁개방 전 90% 이상의 인구가 농촌에서 거주한 것에서 20년 만에 농촌 거주자는 40%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으

25) 國家民委民族問題研究中心(1997, 16~28) 참조.

26) 권영호(2001)을 참조. 현재의 추정으로는, 한국(20여만 명), 일본(4~5만 명), 러시아(5~8만 명), 미국(5만 명), 중동(4~5만 명) 등 40만 명 이상으로 보인다. 최우길(2006)을 참조.

27) 『조선일보』2001. 12. 16 참조.

로 변화한 것이다.²⁸⁾

〈표 4〉 조선족 도시인구변화비율

연도	1990년			2000년		
	총인구 (명)	도시인구 (명)	도시인구 비율(%)	총인구 (명)	도시인구 (명)	도시인구 비율(%)
합계	1,920,527	665,380	34.64	1,923,842	882,308	45.86
동북3성	1,868,377	635,164	34.00	1,775,198	790,276	44.52

* 자료 : 권태환 외 (2002, 18)을 참조함.

개혁개방정책으로 인한 인구이동이 조선족사회의 위기를 초래한 주요한 원인²⁹⁾이라면, 아래와 같은 요인들은 독립적으로 혹은 인구이동의 형성과 더불어 나타난 복합적 요인으로 이 모든 요인이 조선족사회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계획생육(計劃生育 : 계획적인 출산 및 보육)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편향은 인구이동과 더불어 중요한 요인으로 된다.

둘째, 개혁개방으로 말미암아 출산관념에 변화가 일어나 ‘다자다복(多子多福)’이나 ‘후대 잇기’ 등의 전통적 관념이 점차 타파되고 보다 개인적인 생활을 중요시하고 늦은 결혼을 선호하게 되었다.

셋째, 자녀 양육비가 늘어나 자식을 하나라도 더 낳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국조선족 사회의 인구 감소 및 이동으로 인한 조선족 집단 거주지의 해체는 조선족 사회 내부의 연대의식이나 친밀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대약진운동시기인 1959년 한족인구 24만여 명이 중국정

28) 이진영(2006, 4) 참조.

29) 김재기(2005a, 117) 참조.

부의 독려에 따라 돌연 이주하여 1966년에는 한족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서고, 1975년에는 100만 명을 초과하여 자치구내 총인구의 57.6%를 차지하여 조선족 인구수를 훌쩍 뛰어 넘어 과반수를 차지했다.³⁰⁾

(2) 개혁기 조선족정책

건국 후 중국정부의 소수민족정책을 정책과 시기별로 크게 3단계 즉, 온건한 민족융화정책(1949년부터 1957년 대약진 운동 전까지), 급진적(강제적)인 동화정책(1958년부터 개혁개방 전까지), 민족융화정책으로의 복귀(개혁개방시기부터 현재)로 나누는 것은 연구자들 사이에 있어 공통적인 구분이다.³¹⁾

이러한 큰 틀에 따라 중국정부의 조선족정책도 중화민족의 일원으로서의 편입(編入)기, 급진적인 동화기와 개혁기의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³²⁾, 소수민족의 특수성을 인정한 온건한 융합정책에서 사회주의적 동질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부정되는 등 강제적인 동화정책으로, 다시 융합정책으로의 복귀의 패턴을 보인다.

대약진 운동기나 ‘문혁’기에 실행되었던 급진적인 동화정책의 실패에 따라 중국정부는 민족문제가 단기간에 급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였다. 이후 실용주의 세력의 등장으로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사회주의 강국을

30) 김옥녀(2006, 88) 참조.

31) 전성홍(1998) ; 박병광(2000) ; 최우길(2000), 이진영(2002) ; 조정남(2002) ; 이동률(2003) 참조.

32) 이진영은 중국정부의 대 조선족 정책 노선을 중화민족의 일원으로서의 편입(1945-1957), 중화민족으로서의 동화과정(1957-1992)과 제3아이덴티티의 형성과정(1992-)로 보는데 중국정부의 소수민족정책 변천과정의 큰 틀에 맞추어 두 번째 시기는 개혁개방 전까지로 규정하고 개혁기 대 조선족정책을 한중수교를 기점으로 2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은가 싶다.

건설하려는 목표 하에 소수민족에 대한 ‘경제적 통합’을 민족정책의 목표로 새로운 국가통합 방식을 실행했다.

개혁기의 조선족정책은 한중수교를 기점으로 2단계로 세분화 할 수도 있는데, 특히 수교 이후의 시기는 조선족의 민족주의 고양으로, 또 한반도 남북관계의 변화로 조선족문제가 중국의 민족정책과 국가통합에 도전적 요소가 된 시기로, 특히 조선족문제가 중국 내 민족 문제와 남북 간의 외교문제와 중첩되어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기이다. 개혁기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족융화정책은 크게 인구 정책과 문화정책 그리고 경제정책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³³⁾

① 인구정책

중국정부는 1970년대부터 산아제한정책(계획생육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으나 주로 도시에서 시작하여 기타 대부분의 지역은 1980년대 개혁기에 와서 공식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산아정책 실행 과정을 더욱 늦추었다. 그리고 한족에 대해서는 ‘1가구 1자녀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만,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형태의 예외조치, 즉 1,000만 명 이하 인구의 소수민족은 ‘아이 하나를 제창하고 둘째 아이까지 용허한다(한 자녀를 갖기를 권장하되 두 자녀까지 인정한다)’³⁴⁾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조선족사회의 경우는 오래전부터 ‘한 쌍의 부부가 아이 하나’라는 정책을 매우 철저히 시행하였고 또 출산관(出產觀)의 변화나 양육비 부담 증가 등의 원인 때문에 개혁기의 소수민족에 대한 출산의 특혜정책과 무관하게 인구의 감소를 기록했다.

33) 박병광(2000, 437~438) 참조.

34) 정신철(2004, 59~62) 참조.

개혁개방 특히는 80년대 말부터는 농촌처녀들이 대량 도시로 진출하거나 외국으로 떠나버려 농촌에는 총각들이 결혼할 수가 없어 인구재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 1996년 말 전체 중국 길림성 룡정(龍井)시 농촌의 총각 : 처녀비율은 20:1로 대폭 늘어났고 백금(白金)향의 경우 57:1로 기록되고 있다.³⁵⁾

② 문화정책

개혁기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의 문화를 타파의 대상으로 간주하던 ‘문화’기(문화혁명기)와 달리 이에 대한 평등 및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회귀하였다. 중앙정부는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소수민족의 중요한 특징으로 보고, 이에 대해 평등 및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현재 한민족의 언어와 문자로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연변조선족 자치주(延邊朝鮮族自治州)와 장백조선족 자치현(長白朝鮮族自治縣)에서는 민족의 언어로 수업하고 민족의 언어를 조선족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배우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말 잡자신문·출판·방송 등이 있다.

이러한 여건은 우리의 민족문화와 민족의 특징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결혼에 있어서는, 한족을 포함한 기타 민족과의 통혼율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 역시 소수민족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기보다는 개혁기의 도시화 인구의 증가에 따른 급속한 ‘한족화’를 원인으로 볼 수 있다.

③ 경제정책

중앙정부의 소수민족지구에 대한 경제정책은 각종 특혜 및 우

35) 인터넷 게시물 “중국내 조선족의 인구- 약 216만 명 정도”를 참조.

대정책과 민족지역의 실정을 고려하는 경제발전정책의 실시를 특징으로 한다.³⁶⁾ 소수민족지구의 경제개발에 대한 중국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현지실정에 기초한 소수민족의 자력갱생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등소평시대의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지역 간의 격차는 더 심해졌는데 그 동안의 민족융화정책은 큰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으며 분리 독립운동은 더욱 거세졌다.³⁷⁾ 특히,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 소수민족지구의 상대적인 낙후는 국가통합과 민족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강택민 시기에 등장한 것이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 전략³⁸⁾이다. 균형발전을 목표로, 보다 개발주의적·경제주의적 방식으로의 경제적 통합에 역점을 둔 ‘서부대개발’ 전략에는 새로운 시기, 새로운 실정에서 소수민족정책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³⁹⁾ 대표적인 예로 연변조선족자치주 경제의 GDP총량은 1996년만 해도 전국의 30개 민족자치주에서 제1위를 차지하던 것이 1997년에는 제4위로, 1998년에는 제5위로, 2000년에 제6위로, 2004년에 제7위로 떨어졌다.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서

36) 물론 소수민족의 분리주의운동에는 국내정책의 원인 외에도 역사적·구조적 원인, 국제적인 원인 등 중요한 원인도 있다. 이동률(2003, 301~341).

37) 전성홍(1998, 186~192) 참조.

38) 서부대개발과 민족문제 관련 논의는, 이진영(2000); 이종희(2003); 김재기(2001) 참조.

39) ‘서부대개발’의 이유로 정치적인 면에서는 강택민의 리더십 강화, 사회적 불만 통제, 경제개혁 수행을 위한 공산당의 정치적 안정화를 이룩하려는 의도가 있는데, 주로 변경 소수민족 지역에 해당되는 서부개발을 통해 국경방위에 대한 공고화와 함께, 역내 국가들과의 외교적 관계 강화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요인도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원문제 해결, 지역 불균형 해소, 국토의 균형적 발전, 그리고 실업문제의 해결 등을 들 수 있다. 이진영(2000) 참조.

부지역에 속하지 않는 연변조선족자치주도 호남상서토가족 묘족자치주(湖南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와 호북은시토가족묘족자치주(湖北恩施土家族苗族自治州)와 함께 서부대개발의 일부 정책을 상황에 따라 적용받게 되어, 현재 민족자치기관으로 5개 자치구와 30개 자치주 전부가 서부대개발의 정책적 혜택을 받는 범위에 들어간 것으로 된다.⁴⁰⁾

그 외에도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동북진흥전략’의 추진으로, 길림성(吉林省)과 광둥성(廣東省) 정부의 주도로 광둥성의 불산(佛山)시와 ‘짜짓기’⁴¹⁾를 하여 서로의 장점을 발휘하여 함께 러시아 시장으로의 진입에 주력했는데, 2004년에는 연변·불산·상트페테르부르크(구 레닌그라드)시 대표들이 연변조선족자치주에서 무역전시회를 가졌다. 이런 무역구도는 불산시 산업의 발전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연변의 경제발전에도 유리한 것이다.

이밖에 정치 및 사회적 측면에서도 조선족은 민족정책의 혜택을 받았다. 특히 연변은 역대로 중국의 고위급 조선족간부를 배출하는 수송기지로서 방대한 민족 간부진을 구축해 왔다. 근년에 들어서서는 민족간부의 단층현상이 출현하며 조선족간부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은 한족 간부를 많이 충원해서라기보다 정계를 떠나 상업에 종사하거나 조선족간부의 종합적인 자질의 저하, 정부의 중시부족 등의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표면상으로 중국의 소수민족은 정치·경제·문화적으

40) 최초로 2001년 국무원 서부지역개발영도소조판공실의 ‘서부대개발의 약간의 정책 조치 실시의견에 대한 통지’(국무원 2001년 73호 문건)에 의하면 서부대개발은 서부의 12개 성·자치구 직할시를 포함한다. 중국 국무원서부대개발영도소조(國務院西部大開發領導小組) 홈페이지 참조.

41) ‘짜짓기’는 원래 한족지구의 발달한 성·시와 소수민족자치구를 포함한 민족8성간의 수평적 연계를 통해 소수민족지구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연변조선족자치주와 불산시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므로 일단 ‘짜짓기’로 본다.

로 한족과 동등하거나 혹은 특혜의 대우를 받고 있다. 어찌 보면 이러한 융화정책이 소수민족 정체성의 유지에 원심력이 아닌 구심력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의 대우나 융화정책이 실제로 소수민족지역을 경제적으로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유화적인 형태의 민족정책이라는 의도를 다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건적인 융화정책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적 통일성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저변에 담겨져 있다고 하겠다.⁴²⁾

III. 조선족사회의 ‘붕괴’? : ‘불온한 민족’에서 민족융합의 모델로?

현재 의학자들은 하나의 민족이 다른 나라에서 50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그 나라의 정치, 교육, 문화 등 제반 요소에 의해 유전인자까지 변이한다는 이론을 제기하고 있다. 조선민족이 이주하여 일정한 규모를 이루기 시작한 19세기 중엽부터 개혁개방시기까지 백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체성의 위기가 나타나지 않았다. 개혁기 조선족사회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개혁기 전에는 급진적인 동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조선족사회의 정체성 유지 원인

첫째, 벼농사로 인한 집거생활이다. 벼농사 특성상 수원지를 중

42) 박병광(2000, 439) 참조.

심으로 자연스럽게 같은 민족이 모여살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였고 또한 논농사에 필요한 관개수로공사는 일정한 규모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기에 발농사보다도 쉽게 집거지역을 형성할 수 있었다.

둘째, 인연, 지연, 혈연을 중히 여기는 것과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의식이다. 한반도에서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았고 서로의 안면도 없었지만 일단 이국땅에 와서는 모두가 서로 의지하면서 사이 좋게 지냈고 함께 어울려 화목하게 생활하였다.

셋째, 민족교육과 종교이다. 자식의 공부를 위해서는 소까지 판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남달리 교육을 숭배해왔던 한민족은 생활난으로 이국땅에 이주해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자녀교육만을 잊지 않았다. 또 언젠가는 고향땅에 돌아갈 수 있다는 신념으로, 해외에서 독립운동후계자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우리 말, 문화와 풍속을 지켰다. 교육과 더불어 조선족 주민들을 단결시키고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것은 종교였다. 종교는 조선족농민들이 생활상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었으며 또 그들을 단결시키고 민족공동체를 형성시키는 응집력으로 작용했다.⁴³⁾

넷째, 중앙정부가 실행한 민족구역자치제도다. 자치제도의 실시는 조선족이 언어, 문화와 전통 등을 고스란히 지킬 수 있는 데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2. 현시점에서 본 구심력 요인

개혁기 조선족사회의 변화는 조선족 발전과정의 불가피한 ‘진통’

43) 연변대학 편집부(1999, 321)를 참조.

이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중국조선족들이 개혁개방의 추진 하에 역사적 변화를 겪으며 ‘농경민족’에서 ‘도시민족’으로 매진하고 있는 발전추세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발전과정에서 노출된 문제를 ‘붕괴’로 보는 것은 지나친 우려가 아닌 듯싶다. 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조선족사회가 ‘붕괴’된다는 의미의 민족융합의 모델로 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인구이동과 조선족사회의 재조합

첫째, 조선족사회는 아직 굳건히 살아 있고, 시대의 발전에 따른 ‘농경민족’에서 ‘도시민족’으로의 전환은 필연적 현상이며, 또 대도시에 진출한 조선족의 경우에 해당지역의 한국인들과 함께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족 농촌집거구의 파괴, 도시화 비율의 증가에 따른 전통적인 조선족사회의 위기에 대하여 도시에서의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은 조선족사회의 ‘위기설’을 반박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될 수 있다.

우선 조선족사회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측의 논리를 보면, 과거 조선족들이 장악했던 업종이나 영역을 한족들이 잠식해가고 있고, 또 조선족들은 대도시나 해외로 자꾸 빠져나가고 한족들이 계속 그 자리를 메운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현재 조선족 농촌사회를 지키고 있는 세대는 20-30대가 아닌 40-50대의 장년과 부녀들이므로 아직 기반이 튼튼하고 현재 진행 중인 농업 경영의 집약성, 규모화 추세에 따라, 조선족의 농토는 조선족이 많이 농촌을 떠난다고 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⁴⁴⁾

물론 이런 주장과는 반대로 2-30년이 지난 장래에는 농촌사회

44) 정신철(2004, 142)을 참조.

지지기반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가는 반론도 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재반론으로 농업생산의 집약화와 조선족인구의 도시화를 들 수 있다. ‘과기응농(科技應農)’, ‘과기흥농(科技興農)’의 농업발전의 추세로 보아 농업종사인구의 숫자로만 조선족 농촌사회의 붕괴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

또 최근 중국조선족의 도시인구와 농촌인구의 비례는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데, 도시거주 인구가 45.7%에 달하여, 머지않아 도시인구비율이 농촌인구비율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도시에서의 조선족 인구규모 혹은 조선족과 한국인의 인구규모를 볼 때, 대체로 수도권은 약 34만 명(조선족: 북경 12만명+천진 4만명+하북성 1만명, 한국인: 북경 8만명+천진 4만명+하북성 5천명), 화동권은 약 14.5만 명(조선족: 8.5만명, 한국인: 6만명), 산동권은 약 30만명(조선족: 18만명, 한국인: 12만명), 광동권은 약 9만명(조선족: 6만명, 한국인: 3만명), 발해만권은 약 5만 명(조선족+한국인)⁴⁵⁾이며, 조선족과 한국인은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으면서 점차 집거의 정도가 높아지고 상호의존하면서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둘째, 조선족사회의 해체의 중심이 농촌집거구의 해체에 있다면, 조선족 지도층은 대대적인 이농현상의 자활대책으로 ‘조선족집중촌 건설론’ 구상⁴⁶⁾을 내놓고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농촌에서의 조선족공동체의 재구성은 도시에서의 ‘한인공동체’와 더불어 조선족사회 ‘위기설’에 대한 핵심적인 논지이다.

‘조선족집중촌 건설론’은 2002년 초부터『길림신문』이 특별기획한 지상토론 ‘조선족집중촌을 세운다면’에서 정식 제기되었는데,

45) 이진영(2006, 11~14) 참조.

46) ‘조선족집중촌 건설론’ 관련 논의는 崔慶植(2003); 김재기(2005b, 126~129); 『아이뉴스24』a. 참조.

조선족이 중국에서 살아남으려면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까지 돌아올 정도로 조선족사회를 발전시키는 길 밖에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조선족집중촌 건설의 추진은 민족 언어, 문자와 풍속의 계승과 발전, 즉 민족구역자치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자본, 인력, 기술과 교육의 집중으로 보다 큰 경제적인 효과는 물론 공동체의 유지에 유리하며, 해외이동 조선족 인구의 회귀후의 배치 등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

신집거구 건설은 형성되는 지역에 따라 유형화 할 수 있는데, 대도시 중심형(심양, 북경), 연해도시 집중형(요동(遼東), 산둥(山東)반도), 대도시 근교 농촌형(동북 3성 성도를 중심으로), 중심촌형(산재지구 조선족 농촌 집거구들의 통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앞의 3개 유형은 그렇다 치더라도 필자는 맨 마지막 중심촌형 집거구의 건설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혁 후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농민들이 도시로 밀려가는데, 농민공(農民工)⁴⁷⁾들은 도시에서 교육문제, 빈민문제, 불만 증대 등 심각한 문제들을 유발시킨다. 소위 ‘3농(三農: 농업, 농촌, 농민)문제’를 최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을 정도로 현재 중국에서의 농촌문제는 심각하다. 물론 도농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부가 호적제도를 개혁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추리해 낼 수도 있지만, 농민들의 이농현상을 막는 방도의 하나로 중심촌형 집거구의 건설을 주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도시의 경우, 사이버를 유대로 한 사이버공동체의 구축이 바람직하며, 현재 활발히 구축활용되고 있다. 유명한 사이트로 조글로(조선족글로벌네트워크, <http://www.ckyw.com>), 중국조선족대모임(<http://www.yanji.na.mu>), 중국조선족모임사이트(www.zosenzo.com).

47) 농민공 관련 논의는 이민자(2003) 참조.

com), 모이자-[조선족 온라인 커뮤니티](<http://moyiza.net/html/sitemap.html>), 차이나 코리아닷컴(<http://www.china-corean.com>), 쉼터(재일중국조선족포탈사이트, www.shimto.com), 피안뉴욕조선족동포회(<http://www.kcapien.com>) 등이 있다. 조선족들은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을 통해 민족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경험들을 주고받으며 조선족공동체의 새로운 모습인 사이버조선족공동체를 구성해 나가고 있다.

셋째,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의 대량적인 회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⁴⁸⁾이다. 타지방이나 외국에 나가 돈벌이하고 있는 인구 중 절대대다수가 20-40대의 연령계층인데 이들은 주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가족들과 자신의 좀 더 나은 생활을 위해 즉, 계층유지 및 계층이동을 위한 가족전략으로 이동을 하였다는 점이다.

김명희의 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조선족 이주자가 민족성, 혹은 모국에 대한 향수와는 상관없이 순수한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에 살기를 선호한다는 점⁴⁹⁾이다. 이혜경 등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으로 이주한 30대 여성들은 집을 마련하고 개인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40~50대는 자녀들의 교육비용이나 혼인비용 특히 혼인집 마련을 위한 목적을, 그리고 60대는 노후자금 마련과 출가한 자녀들의 사업자금이나 집 마련 비용을 보태주기 위한 목적을 한국행의 주요동기로 밝히고 있다.⁵⁰⁾

이러한 목적과 동기로 볼 때, 특히 가족을 고향에 둔 점을 고려해 볼 때, 인구의 대량적인 회귀는 기대할 수 있다. 게다가 이주국

48) 정신철(2004, 142) 참조.

49) 김명희(2003b, 123~124) 참조.

50) 이혜경 외(2006, 272~273) 참조.

국적취득의 어려움과 설령 국적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본 국민과 다른 사회적·경제적 대우와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 등으로 후회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⁵¹⁾

(2) 조선족경제

조선족경제는 길림성과 연변지역의 경제, 특히는 외화의 수입에서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조선족사회 붕괴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조선족경제의 침체를 드는데, 2000년 연변의 재정수입은 15억 위안으로, 이는 같은 해 연변의 해외노동수입 19억 2,700여만 위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2004년 해외에서 연변으로 송금된 돈은 7억 4,000만 달러, 인민폐로 환산하면 60억 위안으로 연변 전체 재정수입 24억 위안의 두 배를 훨씬 넘으며, 2006년의 경우, 해외취업으로(취업자의 거의 절대 대부분이 조선족임) 자치주에 부쳐온 돈이 10억 달러에 육박했고 휴대한 돈까지 합치면 20억 달러로 추산된다.⁵²⁾

연변경제는 1980년대 말 대(對) 한국무역을 시작한 이래로 상승세를 이어나갔는데, 1997년 한국의 외환/금융위기로 하락세를 보이다, 다시 상승세를 보여 2002년에는 처음으로 1만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06년 무역액은 1억 3.65만 달러⁵³⁾이다. 즉 지나치게 한국경제의존도가 높은 점은 문제가 되지만, 한국경제의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조선족경제의 어려움도 점차 바뀌어 간다는 점이다.

또 이두원의 연구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로 인하여 2004

51) 이동권(2007, 160) 참조.

52) 황유복(『SCK-신조선족(조글로)』미니홈피) 참조. 또 박광성은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연변지역으로의 해외송금액이 40억 달러, 2002년의 경우 연변조세수입의 2.6배에 달한다고 통계수치를 제시했다. 박광성 인터뷰 참조.

53) 『SCK-신조선족(조글로)』참조.

년을 기준으로 약 4만8천여 명의 조선족 고용창출효과가 있었으며, 한국의 대중교류로 인한 조선족사회의 소득(조선족 고용창출 및 소득 증가의 직·간접 효과+한국 진출 조선족의 임금 소득 및 송금)으로 약 2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⁵⁴⁾되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조선족들은 2, 3개국 언어에 능통한 이점을 활용해 무역업에도 대거 진출하고 있다. 또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경제상황은 기타 민족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데, 연변은 역사적으로 교통이 비교적 발달하였고 산업기초시설이 구전하다. 중앙정부의 서부대개발과 동북진흥전략의 실행에 따라 연변과 조선족경제의 발전은 기대가 된다.

한족에 비해 경제적 네트워크의 부재로 조선족경제가 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중국투자 한국 상인들의 경우도 중국의 주류경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점차 조선족보다는 한족인맥을 형성해야 하고 또 실제 한족인맥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⁵⁵⁾ 중국내 나아가서 세계적인 조선족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긍정적인 것은 민족기업인들간 연대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한 조선족 기업인들이 2007년 1월 21일 새해 최고경영자포럼을 북경에서 개최, 민족경제발전을 위한 네트워크구축과 협력 등 방안을 토론했고⁵⁶⁾, 이어 4월에는 동북3성 조선족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심양에서도 비슷한 모임을 가졌다는 점이다.

(3) 민족교육과 문화

한국의 영향력 혹은 지원정책을 들 수 있다. ‘한류’의 영향으로

54) 이두원(2006, 20) 참조.

55) 『아이뉴스24』b 참조.

56) 『인터넷 길림신문』참조.

한국어는 ‘영어 다음으로 쓸모 있는 언어’로 되어 가는 추세다. 중국에서는 한국어학과나 학원이 많이 신설되고 있는데, 조선족 지식인들에게 많은 취직공간을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이는 민족문화의 유지와 전파에도 도움이 된다. 또 민족정체의식의 보전과 한국문화의 공유는 한국과 조선족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데 예컨대, 민족교육사업에 대한 장려, 민족교육기구에 대한 장학금의 마련, 대량의 조선족학생들의 한국유학 승인, 한국기업의 조선족지역에 투자, 한국기업이나 한국국가기관에의 취직, 조선족지역 원자재 사용, 방문취업정책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국은 조선족사회 붕괴를 저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들을 갖추고 있다.⁵⁷⁾ 해외동포들과의 교류에서의 핵심적 사안으로, 한국정부는 한국 내 취업을 개방하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기회로 조선족들에게 고국의 문화와 선진기술을 전수하여 그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간 후 중국에서 고국의 문화를 전파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능히 한국의 동북아 진출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들의 성장을 도와주어야 한다.

(4) 소수민족정책

소수민족에 대한 급진적 동화정책은 소수민족의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상술했던 것처럼 대약진시기 및 “문화”기와 상반되는 온건한 융합정책의 실시는 소수민족의 동화를 장시기를 걸쳐 실현한다는 것인데, 민족의 언어와 문자의 사용 등은 역으로 정체성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점이 바로 소수민족정책에 대한 중국정부의 딜레마라 하겠다. 물론 회족(回族)이나 만주족(滿族)같이 한족에 동화되어 버린 민족도 있지만,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을

57) 김병호 인터뷰 참조.

걸쳐 한족화가 실현될지 의문이다. 특히 조선족처럼 현거주국보다 더 발전한 한국에 고국을 두고 민족경제의 고국 의존도가 높은 민족의 경우는 더 그렇다.

(5) 기타

첫째, 조선족사회의 많은 지성인들이 이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해결대책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⁵⁸⁾ 인터넷 사이버 공간의 발전으로 조선족은 직업별, 직능별로 다양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던 집중촌 건설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교환은 물론, 현 조선족사회의 문제점과 향후 발전에 대한 일련의 토론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 최고 IT강국인 한국의 영향을 받아 조선족의 경우 IT로 다시 뭉쳐 재도약 하려는 발상도 제기⁵⁹⁾되고 있다.

둘째, 그동안의 한국과의 교류과정에서 중국조선족은 자기의 현주소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즉, 동정(개혁개방 전)에서 동경(88 올림픽을 계기로, 특히는 수교이후)으로, 동정에서 분노로(수교 후의 교류과정), 분노에서 객관적인 평가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⁶⁰⁾ 이에 따라 모두 상호간의 자기 점검이 필요한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접촉초기에만 해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점에서 혈연, 동포 등과 같은 개념이 서로간의 의식에 깊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58) 정신철(2004, 132) 참조.

59) 『아이뉴스24』a. 참조.

60) 구체적인 글을 통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필자가 참가하는 모임인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KCN, 한국에서 공부하는 대학원생 300여명으로 구성. <http://www.kcn21.net>)에서 진행한 여러 차례의 세미나와 조선족을 주제로 한 동북아평화연대 등 NGO단체에서 진행한 세미나에서는, 현시점에서 적지 않은 지성인들이 한국만 탓하지 말고 자신에 대해 반성할 것과, 한국과 한국사회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조선족학자나 지식인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다.

일련의 접촉을 통해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서로 다른 정도의 피해를 끼쳤다. 다년간에 걸쳐 쌓여온 상호불신을 해소함으로써 상호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와 같은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중국조선족동포들로 하여금 동북아에서 한국의 문화를 수용하고 전파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외에도 4,000여명의 조선족 유학생과 10만 근로자들이 조선족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수준까지 통제 가능한지 등의 문제도 있다. 단적인 예로 정부에서는 한국 위성방송 시청에 대한 철폐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시청을 계속하는 것이 현실이다. 상술한 요인으로 볼 때 필자는 조선족사회의 ‘위기설’이나 ‘붕괴론’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IV. 결론

사회주의 하에서의 중국정치는 의사의 형성이나 결정이 일원화되고 일방적인 구조 속에서 규정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은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개혁 개방 이후의 급격한 경제발전과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인한 국제사회의 변화로 중국정부는 다양한 통제기제를 모색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 속에서 체제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소수민족문제이다. 이미 러시아의 경험에서 확인된 바 있듯이 분리주의는 단순한 영토의 분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중앙정부의 통제기제 약화와 함께 이로 인한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급격히 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명실 공히 세계적인 대국의 대열에 들어서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민족분리주의는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민족정체성이란 성원들 사이에 공유되어 있는 민족적 특성과 개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민족적 차원에서 자기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것을 가리킨다. 개혁개방 이후, 특히 한중수교 이후 조선족 사회는 ‘농경민족에서 도시민족(산업민족)으로’의 변화 혹은 ‘농업민족에서 비농업민족으로’의 발전이라는 이중의 사회 변화를 경험했다. 19세기 말부터 조선족 이민들과 그 후손들이 살아온 농촌이 붕괴했다는 것은 조선족이 원래 갖고 있던 ‘민족의 문화 영토’를 조금씩 상실하는 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언제든지 한 민족의 유지에는 그 민족의 특유한 문화가 우선인 만큼 문화가 유지된다면 그 민족은 남아 있는 것이고 문화를 상실한다면 그 민족은 타민족에 의해 동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족의 운명이다. 민족 정체식의 보전과 한국문화의 공유는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이런 민족문화의 보존과 민족의 정체성의 유지를 위해서는 조선족을 포함한 한민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영호. 2001. “중국 조선족의 변화 그 뒤에 한국이 있다.”
http://ns.moyiza.net/bbs/bbs.php?id=kc_column&page=1&sn1=&divpage=1&sn=off&ss=on&sc=off&keyword=중국%20조선족의%20변화%20그%20뒤에%20한국이%20있다&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4(검색일: 2007.3.10).
- 권태환. 2003. “중국조선족 사회의 변화: 1990년대를 중심으로.” 『2002년

재외동포재단지원연구과제 보고서」.

- 김명희. 2003a. “한국내 조선족의 정체성과 한국관.” 『계간사상』. 가을호.
- _____. 2003b. “1990년대 이후 국민국가 독일의 재러 독일계 동포이주자에 대한 정책 고찰: 한국내 조선족 이주자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정책적 접근의 모색을 위하여.” 『재외한인연구』. 제13권, 1호.
- 김옥녀. 2006. 『중국정부의 소수민족정책에 관한 연구-조선족사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기. 2001. “중국의 민족문제와 ‘서부 대개발’: 정치경제적 배경과 딜레마.” 『한국동북아논총』. 제18집, 1호.
- _____. 2002. “중국 조선족 집거구 해체 위기와 대응.” 『재외한인연구』. 12권, 1호.
- _____. 2003. “중국 동북3성 조선족 집거구의 현황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제28집.
- _____. 2005a. “중국 조선족 농촌 집거구 해체위기와 ‘집중촌’ 건설.” 『統一問題研究』. 하반기호(통권 제44호).
- _____. 2005b. “남북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대북한 경제협력 -중국 조선족과 재일 조총련 동포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34집.
- _____. 2006. “중국 조선족의 과계민족(跨界民族)적 특성과 북한 및 통일관.” 『한국동북아논총』. 제38집.
- 박병광. 2000. “중국 소수민족정책의 형성과 전개: 민족동화와 융화의 변주곡에 관하여.” 『국제정치논총』. 제40집, 4호.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2002. “국내 재중동포 노동자-재외동포인가, 외국인인가?” 『동향과 전망』. 봄호.
- 연변대학 편집부. 1999. 『중국조선족발자취총서 1: 개척』. 연변대학출판사.
- 유명기. 2002. “민족과 국민 사이에서: 한국 체류 조선족들의 정체성 인식에 관하여.” 『한국문화인류학』. 35(1).
- 유명기 외.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0집, 5호.
- 윤인진. 2002. “세계 한민족의 이주 및 정착의 역사와 한민족 정체성의 비교연구.” 『재외한인연구』. 12권, 1호.
- 이동률.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운동: 시짱과 신장을 중심으로”, 전성홍 편. 2003. 『전환기의 중국사회Ⅱ』. 오름.
- 이동권. 2007. “한국 국적이 있어도 조선족은 외국인이에요.” 『진보적시사

- 종합자-월간 말』. 3호.
- 이두원. 2006. “한중경제교류가 조선족 경제에 미친 역할.” 『東北亞經濟研究』. 18권, 1호.
- 이민자. “소수민족의 분리주의 운동: 시짱과 신장을 중심으로”, 전성홍 편. 2003. 『전환기의 중국사회Ⅱ』. 오름.
- 이중희. 2003. “장쩌민 시대의 소수민족정책과 서부대개발.” 『아시아연구』. 6권, 2호.
- 이진영. 2000. “중국 서부지역개발과 민족문제(한국 세계 지역 연구 협의회 춘계 학술회의 발표 논문).”
- _____. 2001. “중국정부가 바라보는 조선족과 조선족 정책(재외동포법문제 공청회 발표문).” 『교포정책자료』. 제62집.
- _____. 2002a. “중국의 소수민족정책.” 『민족연구』. 제9호.
- _____. 2002b. “한-중 외교관계와 재중 동포-재외동포법 헌법 불일치 결정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8권, 4호.
- _____. 2002c.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법 개정의 쟁점과 대안.”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4호.
- _____. 2002d. “중국공산당의 조선족 정책의 기원에 대하여(1927~1949).” 『재외한인연구』. 제9호.
- _____. 2002e. “조선인에서 조선족으로: 중국 공산당의 연변(延邊)지역 장악과 정체성 변화(1945~1949).” 『중소연구』. 통권 95호.
- _____. 2006. “중국 5대 경제권역의 새로운 재중동포 권역 형성 및 시각.” 내부세미나 발표문.
- 이현정. 2001.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7권, 2호.
- 이혜경·정기선·유명가·김민정.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학』. 제40집, 5호.
- 임봉길. 1997. “Hmong족의 민족정체성과 현실.” 『민족과 문화』. 5권.
- 임채완·김경하. 2002. “중국 연변조선족의 민족정체성 조사연구.” 『대한정치학회보』. 10권, 1호.
- 임채완. 2002. “연변조선족의 북한, 통일관 조사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4호.
- 전성홍. 1998. “개혁기 중국의 티벳 정책: 분리주의 운동에 대한 중앙의 ‘개발주의’ 전략.” 『동아연구』. 제36집.
- 전인영·김소중·금희연. 1996. “중국의 소수민족정책: 간부층원과 경제지

- 원정책을 중심으로.”『중소연구』. 제20권, 3호.
- 전형권. 2006. “모국의 신화, 노동력의 이동, 그리고 이탈: 조선족의 경험에 대한 디아스포라적 해석.” 『한국동북아논총』. 제38집.
- 정신철. 2004. 『한반도와 중국 그리고 조선족』. 모시는 사람들.
- 조정남. 2002. “중국의 민족분쟁지역 분석.” 『민족연구』 제9호.
- 최우길. 1999.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 변화에 관한 소고.” 『재외한인연구』 제8호.
- _____. 2000. “현대 중국민족문제에 관한 소고” 『세계지역연구논총』 14집.
- _____. 2001a. “재외동포정책의 문제점: 재중동포정책과 관련하여.” 『교포정책자료』 제62집.
- _____. 2001b. “남북관계와 중국 조선족.” 『재외한인연구』. 제11호.
- _____. 2006. “세계화와 조선족 민족교육.” 『중국동포타운신문』. 2006.09.18.
- 허명철·송관덕·림금숙 외. 1994. 『중국조선족우월성연구』. 연변인민출판사.
- 허명철 외. 2003. 『연변조선족교육의 실태조사와 대안연구』. 료녕민족출판사.
- 『동아일보』 1994.01.28.
- 『조선일보』 2001.12.16.
- 『홍콩강신문』 2007.01.30.
- 『아이뉴스24』a.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6348&pay_news=0&g_menu=090300(검색일: 2005.12.11).
- 『아이뉴스24』b.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8291&pay_news=0&g_menu=090300(검색일: 2005.12.11).
- 『인터넷 길림신문』.
http://www.jlxcwb.com.cn/articleview/2007-01-21/article_view_13614.htm(검색일: 2007.01.21).
- 『SCK-신조선족(조글로)』.
http://www.ckyw.com/news_2007/board.php?search_mode=all&board=news_jingji&act=view&no=910&search_word=무역액(검색일: 2007.04.20).
- 김병호 인터뷰.
<http://news.media.daum.net/society/education/200612/13/yonhap/v>

- 15042045.html(검색일: 2007.01.15).
- 박광성 인터뷰.
http://linux23.kbs.co.kr/blueboard/board.php?cmd=view&db=1Radio%2F1Rinterv_paper&field=&findstr=&key=355(검색일: 2007.04.20).
- 정해운. “중국동포의 마지막 자존심.”
<http://www.korean.net/club/bbs/index.jsp?clID=hanin&biID=289&mode=V&bID=3902>(검색일: 2007.05.03).
- 황유복. “조선족발전 5대 문제와 그 해결대책.”
http://www.ckywf.com/news_2007/board.php?board=f_xueshu06&act=view&no=79(검색일: 2007.05.03).
- 인터넷 게시물. “중국내 조선족의 인구- 약 216만 명 정도.”
<http://blog.paran.com/love2004/5500646>(검색일: 2007.05.05).
- 崔慶植. 2003. 『全球化背景下的思考: 中國民族政策及朝鮮族歷史, 現狀與未來』. 中國中央民族大學博士學位論文.
- 國家民委民族問題研究中心. 1997. “對外開放與中國的朝鮮族.” 『民族研究』. 第6期.
- 國家民族事務委員會 <http://www.seac.gov.cn/homepage/homepage.jsp>(검색일: 2007.04.15).
- 國務院西部大開發領導小組
<http://www.chinawest.gov.cn/web/NewsInfo.asp?NewsId=34850>
 (검색일: 2007.04.15).
- 全國文化信息資源共享工程
<http://www.ndcnc.gov.cn>(검색일: 2007.04.18).
- 延邊朝鮮族自治州統計局 <http://www.stats-ybz.gov.cn/tjgb.html>(검색일: 2007.05.03).
- 中華人民共和國統計局人口普查公報 1~5(1953년, 1964년, 1982년, 1990년, 2000년).
<http://www.stats.gov.cn/tjgb/rkpcgb>(검색일: 2007.04.15).

ABSTRACT

Study on Identity of China-Korean Society : Focus on Centripetal force and Centrifugal force

Li Xiangyu

Ph. D Candidate,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diplomacy, Sogang University

The China-Korean is a migrate nation not settled nation. Then, they became a minor nation. The Reform Open Policy deeply changes the China-Korean Society, specially Korean-China Amity impacts their Nationalism so the China's central government scrutinize them.

Nowadays, some researchers insists that China-Korean Society's Crisis or Breakdown and then it became a China Nation Union model. But this paper analyze the cause of China-Korean Society's Crisis and the meaning of it.

In conclusion, the China-Korean Society take some changes and face up to some difficulties but these are inevitable pains not dissolution or corruption.

Key Words: China-Korean Society, Identity, Centripetal force,
Centrifugal force.